

- \* 이는 연금제도가 현역 세대 스스로 노후를 위해 연금자산을 저축하는 적립방식에서 고령자를 현역 세대가 직접 부양하는 부과방식으로 바뀐 데에 기인함.
- \* 이는 고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1인당 부담액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하며, 실질적으로 현 세대의 사회보장관련 부담을 이후 세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

■ 또한 현행 연금제도는 동일 세대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바,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필요

- 현행 연금제도는 피용자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주의 보험료는 부양가족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바, 피부양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기초연금이나 의료급부를 받음.
-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독·맞벌이 세대 피용자, 개인단위의 국민연금·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.

#### 다.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<sup>28)</sup>

-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나,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심각한 재정악화가 예상됨.
  - 일본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나, 국채만으로는 세수와 세출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시키기가 쉽지 않음(〈그림 15〉 참조).
  - \* 하지만 아베노믹스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.
  - 하지만 장기금리가 급상승하는 경우 일본정부의 세입과 세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동시에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서 거액의 평가손실액이 발생할 것임.

28) 德島勝幸, “アベノミクスの財政政策に対する評価と社会保障制度の再構築”, ニッセイ基礎研究所, 2013.05.28.